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유럽의회, CBAM 적용 하류제품 확대 개정안 본회의 통과(9.15)
- EU 집행위원회, 역내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유럽 혁신법 제안

■ 단 신

- [디지털] EU, 유럽 제품법 통해 디지털제품여권 활용 확대 및 유럽 표준 무료 공개 추진
- [배터리] EU, 폐배터리 재활용 및 핵심 원료 회수 목표 현행 유지 결정
- [통상] EU, 국제조달수단(IPI) 전면 검토...제3국 조달시장 내 EU 접근장벽 대응 점검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 정	내 용
9.16(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2026) 발표



PPWR 지원 사업 안내

* 링크 클릭 시 사업 참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기관명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링크
KOTRA	EU 통상현안 헬프데스크	PPWR 등 EU 통상현안 관련 기업 애로 상담	링크
KTR	EU PPWR 대응 원스톱 서비스	시험·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대응 지원	링크
	'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링크
KCL	PPWR One-stop Compliance	수출바우처를 통한 시험·TD·DoC 검토 통합 지원	링크
aT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컨설팅)	PPWR 관련 자문, 검사·문서작성·평가 지원 * 예산 소진 시 마감	링크

유럽의회, CBAM 적용 하류제품 확대 개정안 본회의 통과(9.15)

- ◎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80개 하류제품에 더해 277개 품목코드를 추가하고, 우회·남용 방지 조치를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 ◎ EU 입법기관별 입장 확정으로 3자 협상이 착수될 예정이나, 최종 대상 품목과 한시적 면제 조항 등을 둘러싼 입장차로 합의 도출까지 난항 전망

■ 개 요

- '26.9.15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CBAM 강화안이 통과되면서 의회 입장이 확정
* 표결 결과 : 찬성(464표), 반대(50표), 기권(159표)

〈CBAM 강화 개정안('25.12.17 집행위원회 제안)*〉

* as regards the extension of its scope to downstream goods and anti-circumvention measures

- **(주요 내용)** △철강·알루미늄을 함유한 180개 하류제품(downstream goods)으로 적용 확대, △우회·남용 행위 방지 강화, △특정 품목의 한시적 적용 면제 조항(27a조) 도입 등

- EU 이사회가 '26.6.12일 입장을 확정하는데 이어 유럽의회 입장도 확정됨에 따라, EU 입법기관 간 합의를 위한 3자 협상(trilogue)이 본격 착수될 예정
- **(입법 경과)** EU 집행위원회 제안('25.12.17) → EU 이사회 입장 확정('26.6.12) → 유럽의회 상임위원회(ENVI) 가결(7.9) → 유럽의회 본회의 가결(9.15)

■ 유럽의회 입장 주요 내용*

* 9.15일 기준 본회의 채택문이 공개되지 않아 의회 상임위 가결안('26.7.9) 및 본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

- **(대상 품목 확대)**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80개 하류제품(downstream)에 더해 기계·전기기기·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총 277개 품목(CN 코드)*을 추가
* 품목 수는 부속서에 기재된 CN 코드를 기준으로 한 잠정치로, 실제 순수 신규 품목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유럽의회가 추가한 CBAM 하류제품 대상 품목 예시〉

품목군	품목 예시
유기화학물질(HS 29)	메탄올
기계류(HS 84)	냉장·냉동기기, 펌프, 크레인·지게차, 농기계, 세탁기, 건조기 등
전기기기(HS 85)	전동기·발전기, 변압기, 가정용 전열기기(전기온수기·조리기기 등),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HS 87)	화물차, 범퍼·차체 부품, 브레이크, 차축, 배기장치, 조향장치 등
의료·분석기기(HS 90)	영상진단기기(MRI 등), 주사기, 치과기기, 투석 장비 등

- **(온라인 원거리 판매 적용)** 제3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EU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품목에도 CBAM 의무 적용*
 - * EU 관세법상 원거리 판매 수입자로 지정되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그 지정대리인이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 의무 부담
- **(한시적 면제 조항 삭제)** 심각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특정 품목을 CBAM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제27a조 삭제*
 - * 품목 제외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특정 산업의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대신, 역내 시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CBAM 재정수입을 피해 산업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제시
- **(국제 탄소 크레딧 반영 삭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국제 탄소 크레딧(파리협정 6조)을 CBAM 인증서 제출량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 삭제
 - *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감축 효과가 불확실해 현 단계에서의 반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 **(제3국 협정상 CBAM 특례 제한)** EU가 제3국과 체결하는 무역·협력 협정 등에 CBAM 이행을 저해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
 - * CBAM 수입신고자의 의무 면제 또는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의무 경감 등이 해당. 다만, 제3국 배출권거래제와 EU-ETS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협정은 제외
- **(50톤 면제 기준 보완)** 50톤 면제로 제외되는 배출량이 개별 품목별(CN 코드) 전체 배출량의 2%를 초과하는지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제안
 - * 현행 50톤 기준은 90%의 수입자를 면제하면서도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의 99% 이상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됨. 단, 개별 품목별 면제 비중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스크랩 산정)** 집행위원회가 배출량 산정 대상 투입재(precursor)로 제안한 소비 전 철강·알루미늄 스크랩 중, 철강 스크랩은 제외하고 알루미늄 스크랩만 유지

(참고 : 알루미늄) 로이터(Reuters)는 소비 후(post-consumer) 알루미늄 스크랩을 산정에 포함하고, 알루미늄 품목의 면제 기준을 연 50톤→5톤으로 낮췄다고 보도(9.15). 세부 내용은 본회의 채택문 공개 후 확인 필요

- **(철강 조강시설 증빙)** 철강 품목의 내재 배출량을 실제값 기반으로 산정 시, 조강 시설 관련 증빙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필요
 - * MTC : Mill Test Certificate. 동 증명서는 EU 철강 쿼터 규정(EU 2026/1384)에서도 '26.10.1일부터 조강국(melt and pour country)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될 예정
- **(우회·남용 행위 방지 강화)** 자원 리셔플링을 남용 행위에 포함하고, 남용될 위험이 높은 특정국 품목이나 인위적인 공급망 조정 행위 적발 시 기본값 적용

(참고) 자원 리셔플링(resource shuffling) :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저탄소 제품만 EU로 수출하고, 고탄소 제품은 규제가 느슨한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

- 남용 행위와 연관이 없음을 입증 시 실제값 사용이 가능하며, 집행위원회는 추후 위임법을 통해 실제값 사용 조건을 마련할 예정

■ EU 입법기관별 CBAM 강화 개정안 입장 정리

〈입법기관별 CBAM 강화 개정안 입장 비교〉

구분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
대상 품목 확대	180개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 확대	집행위원회안에 약 200개 품목 추가*	집행위원회안에 277개 품목 추가*
면제 기준	연간 50톤	집행위원회안 유지	알루미늄 품목 5톤으로 인하**
한시적 면제 (27a조)	도입	도입	삭제
스크랩 산정	소비 전 철강·알루미늄 스크랩을 산정에 포함	집행위원회안 유지	소비 전 스크랩은 알루미늄만 포함, 소비 후 알루미늄 스크랩도 포함**
온라인 판매	별도 언급 없음	별도 언급 없음	온라인 판매 등 원거리로 판매되는 CBAM 품목에도 적용
제3국 협정 특례 제한	별도 언급 없음	별도 언급 없음	EU-제3국 협정에 CBAM 이행을 저해하는 조항 금지
국제 탄소 크레딧 차감	파리협정 제6조상 탄소크레딧을 인증서 제출량 산정에 반영	집행위원회안 유지	삭제

* 품목 수는 부속서에 기재된 CN 코드를 기준으로 한 잠정치로, 실제 순수 신규 품목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로이터(9.15) 보도 기준. 알루미늄 면제 기준 및 소비 후 스크랩 관련 내용은 본회의 채택문 최종 확인 필요

자료 : 집행위원회·유럽의회·EU 이사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 향후 일정 및 전망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입장 확정에 따라, 연내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3자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타결 시 하류제품에 대한 CBAM 적용은 '28.1.1일부터 시행 예정
- 단, 최종 대상 품목의 범위와 한시적 면제 조항 등 기관별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전망

• 자료 : 유럽의회(9.15), Reuters(9.15)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doyeonkim@kotra.or.kr)

EU 집행위원회, 역내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유럽 혁신법 제안

- ◎ EU는 유럽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EU 공통 연구개발 조달 절차를 수립하고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
- ◎ 유럽 혁신법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 공공조달의 법적 틀을 마련하고, 혁신 기술이 지식재산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 구축

■ 개 요

○ EU 집행위원회, 유럽 혁신법 제안

-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은 EU 경쟁력 나침반과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을 통해 역내 혁신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로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구체적 입법 조치를 포함

〈EU의 혁신 생태계 강화 조치〉

- (EU 경쟁력 나침반) '25.1.29일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과의 생산성·성장률 격차를 줄이고, 공급망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경쟁력 나침반 전략을 발표. 특히 회원국 간 혁신 격차를 줄이고,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 및 유럽 혁신법 등을 제시
-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 '25.5.28일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 전략을 발표. 특히 핵심 전략 기술 분야를 식별하고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해 △EU 스케일업 펀드 신설, △혁신 촉진 환경 조성, △자금 조달 활성화, △시장 진출 지원, △우수 인재 유치, △인프라·네트워크·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 등 추진

- 초안은 EU의 연구개발(R&D) 공공조달 및 관련 투자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음을 지적하며, 현재 172.8억 유로 규모의 R&D 공공조달을 864억 유로로 확대 목표
 - * EU의 R&D 공공조달은 전체 공공조달의 0.6% 비중이며, 미국은 3.5%, 한국은 5%임. 이에 집행위원회는 R&D 조달 투자를 전체 공공조달의 3% 수준으로 상향 목표 설정
- 동 법안은 R&D 공공조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 재정 지원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혁신 기술이 지식재산권(IP)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구축 지원
- 한편, 집행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유럽 혁신법의 주요 조치에 더해 향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EU 공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EU 이사회에 권고안 제안
 - * 규제 샌드박스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 기업·연구원·당국이 신기술을 제한된 시간 동안 당국 통제·감독하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유럽 혁신법의 주요 내용

○ 회원국 간 공동 R&D 조달을 위한 EU 공통 규칙 수립

- 역내 혁신 기술의 산업 역량 구축을 목표로 핵심 기술·딥테크·전략적 산업 분야의 EU R&D 프레임워크 수립하여 회원국 간 R&D 조달 활용 촉진

(참고) EU 경제 안보를 위한 10대 핵심 기술(EU) 2023/2113

① 첨단 반도체 기술, ② 인공지능 기술, ③ 양자 기술, ④ 생명공학, ⑤ 첨단 연결성·내비게이션·디지털 기술, ⑥ 첨단 감지 기술, ⑦ 우주추진 기술, ⑧ 에너지 기술, ⑨ 로봇공학·자율 시스템, ⑩ 첨단소재 제조·재활용 기술

- 동 법안은 R&D 조달의 일반 원칙 및 주체, 하도급, 조달 문서, 조달 참여 요건, 원산지 결정 방법, 선정 기준, 공고, 평가 기준, 성과 이익 분담 등을 명시
- 유럽 혁신법은 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추정 가치 '26년 기준 21만 6천 유로 이상의 R&D 서비스에 적용되며, 해당 공공조달에는 EU 회원국 대학 및 스타트업·스케일업·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음

* EU 공공조달 지침(2014/24/EU)의 제4조 공공 서비스 계약 금액 하한선

- 회원국 외에도 EU와 'R&D 공공조달' 의무가 포함된 국제 협정을 체결한 역외 국가*도 참여가 가능. 다만, 입찰 부족·과도한 조달 비용 상승 등 예외 시에는 EU와 '일반 공공조달' 개방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음

* 현재 EU와 R&D 공공조달 시장 개방 의무가 적용되는 역외국은 EEA(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SAA(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로 한정

○ 혁신 기술의 IP 가치 평가 지원을 위해 EU 지식재산청(EUIPO) 내 역량센터 설립

(참고) EU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 지식재산청은 '94년 유럽 상표디자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16년 현재의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내 단일 상표·디자인 등록·관리, IP 침해·위조 방지, 회원국·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

- 무형자산인 혁신 기업의 신기술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EU 지식재산청 내 IP 금융 역량센터(competence centre on IP-backed finance) 설치를 의무화하고, 역내 공통 IP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 IP 금융 역량센터는 금융 기관에서 혁신 IP를 담보로 하는 새로운 공공·민간 금융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업화 단계의 기업이 IP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IP 마켓플레이스 구축 지원
- 또한 혁신 기업의 IP 평가와 금융 기관의 IP 기반 상품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지식재산권 평가사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 양성 및 관련 평가의 표준화 추진

• 자료 : EU 집행위원회(9.9, [FAQ](#))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윙희(unoin@kotra.or.kr)

■ EU, 유럽 제품법 통해 디지털제품여권 활용 확대 및 유럽 표준 무료 공개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제품 규정을 디지털 및 순환경제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유럽 제품법(European Product Act)’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Politico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10.6일 발표될 예정임
 - 유럽 제품법은 하나의 개별 법률이 아니라 ‘유럽 제품 규정(European Product Regulation)’ 법안과 ‘유럽 표준화 규정(Regulation on European Standardisation)’ 개정안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지임
 - 유럽 제품 규정 법안은 신입법체계(NLF)* 개정과 시장 감시 규정 개정을 하나로 합친 것이며, 유럽 표준화 규정 개정안은 이와 연계하여 별도로 추진될 예정임
- * 신입법체계(New Legislative Framework) : EU 제품 법률의 일관성을 위해 시장 출시와 적합성 평가 등에 관한 공통 원칙을 정한 기본 틀
- 유럽 제품법 패키지는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유럽 제품 규정 준수 체계에 활용하고, EU 법률에서 인용하는 유럽 표준을 무료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 EU는 '24년 발효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통해 일부 제품군에 DPP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유럽 제품 규정안은 DPP를 제품 규정 준수 체계에 연계할 예정임
 - DPP에는 제품 식별, 규정 준수 및 공급망 관련 정보가 담기며, 해당 정보는 생산·수입부터 온라인 판매, 재정비 및 시장 감시까지 제품을 따라 관리될 예정임
 - 세관 당국, 규제 기관 및 소비자는 각자의 접근 권한에 따라 DPP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유럽 표준화 규정’ 개정안은 EU 법률에서 인용하는 유럽 표준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표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
 - 동 개정안에 대한 EU의 영향 평가는 유럽 표준을 무료로 공개할 경우 각국 표준화 기관의 수입이 연간 최대 3천만 유로 감소할 수 있으며, 재정적 영향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600만 유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

■ [배터리] EU, 폐배터리 재활용 및 핵심 원료 회수 목표 현행 유지 결정

- EU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규정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과 주요 원료 회수 목표를 검토한 결과, 현행 목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 : EU 시장 내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하며,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회수 목표 등을 규정
-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기술 변화와 재활용 기술 발전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현행 목표를 조정할 만큼 시장 및 기술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재활용 기준 목표〉

• 배터리별 재활용 효율 목표(평균 중량 기준)

'25년 말까지 : (납축전지) 75%, (리튬 배터리) 65%, (니켈-카드뮴 배터리) 80%, (기타 폐배터리) 50%

'30년 말까지 : (납축전지) 80%, (리튬 배터리) 70%

• 주요 원료 회수율

'27년 말까지 : (코발트·구리·납·니켈) 90%, (리튬) 50%

'31년 말까지 : (코발트·구리·납·니켈) 95%, (리튬) 80%

- 집행위원회는 단순 목표 상향보다 EU 내 폐배터리 처리능력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함
 - EU 공동연구센터(JRC)는 리튬 회수 목표를 현행 대비 10%p 조정하더라도 EU 전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요 제약 요인은 개별 시설의 회수율보다 EU 역내 처리능력 부족에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코발트·니켈·구리·납의 회수 목표는 이미 기술적 한계에 근접해 추가 상향 시 재활용 업계 부담에 비해 원료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 현행 목표 유지는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2차 원료의 역내 공급을 확대해 EU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EU는 RESourceEU 행동계획을 통해 배터리 관련 원료 가치사슬의 특정 단일국 의존도를 '29년까지 30~50% 감축하는 것을 추진 중
 - 집행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시장 변화를 지속 점검하고, '31.8.18일까지 목표 적정성을 재평가할 예정

• 자료 : EU 집행위원회(9.11)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박미진(mjpark.bru@kotra.or.kr)

■ [통상] EU, 국제조달수단(IPI) 전면 검토...제3국 조달시장 내 EU 접근장벽 대응 점검

-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조달수단(IPI)*의 적용범위, 운영 및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첫 공개 의견 수렴 실시
 - 이번 의견 수렴은 IPI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제도 전반의 검토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효과와 제도적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 (대상) EU 생산자, 공공조달 기관, 무역업자, 수입업자 등 이해관계자
 - (검토사항) IPI 적용 범위, 원산지 판정, 조달 장벽 온라인 신고 시스템, 조사 및 협의 절차, 적용 기준금액, 조치 형태와 범위, 낙찰자 의무 및 예외 등
 - (기간) 2026.9.8.~12.1일([링크](#))

〈EU 국제조달 수단(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

- '22년 제정된 EU 국제조달 수단 규정(Regulation (EU) 2022/1031)은 비EU 국가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EU 기업·상품·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정책 수단
- EU 집행위는 제3국이 자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EU 기업·상품·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관행을 조사하고 해당국과 협의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 기업·상품의 EU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 EU는 '24년 중국 의료기기 조달시장에서 EU 기업과 제품의 접근이 제한된 데 대해 첫 개별 IPI 조사에 착수했으며, '25.6월 EU 내 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조달에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계약상 중국산 의료기기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최초의 IPI 조치를 채택

- 이번 IPI 검토는 EU 공공조달법(PPA) 개편안*과 함께, 공공조달을 산업·경제 안보와 통상 상호주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EU의 정책 방향을 반영
 - * EU 집행위는 '26.9.9일 기존 3개 공공조달 지침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유럽산 우대 기준과 안보·회복력 등을 조달에 반영하는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개편안을 제안
 - PPA가 EU 공공조달의 일반적인 참여·입찰 기준을 재편한다면, IPI는 제3국이 자국 조달시장에서 EU 기업 등의 접근을 제한할 경우 해당국 기업·상품·서비스의 EU 조달시장 접근에 추가 제한을 부과하는 상호주의적 대응 수단
 - 향후 국제조달 협정의 적용 범위와 원산지 판정 기준, 협정 비대상 조달에 대한 IPI 적용 여건 등을 지속 점검할 필요

• 자료 : EU 집행위원회([9.10](#))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 업	품 목	CN 코드	유 형	조 치	대상국	발표일
화학	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	29173600	반덤핑	관세부과	한국, 멕시코	'26.8.10
철강	규소망간강 와이어 (Wires of silico-manganese steel)	72292000	반덤핑	잠정관세	중국	'26.8.10
철강	PSC 강선 및 강연선 (PSC wires and strands)	7217, 7312	반덤핑	만료재심	중국	'26.9.1
철강	스테인리스 냉강압연제품(SSCR) (Stainless steel cold-rolled products)	7219, 7220	반덤핑	만료재심	인도, 인도네시아	'26.9.15
철강	스테인리스 냉강압연제품(SSCR) (Stainless steel cold-rolled products)	7219, 7220	반덤핑	만료재심	중국, 대만	'26.9.15

📅 EU 분야별 의견 수렴

분 야	내 용	수렴 기간	링크
디지털	신규 클라우드·AI 개발법 초안 의견 수렴	7.2~9.29	링크
R&I	Horizon Europe 유럽 파트너십 공동사업단 이행체계 개편 위한 의견 수렴	7.10~10.16	링크
산업	EU 이중용도 수출입 규정 관련 의견 수렴	7.23~10.15	링크
에너지	에너지·타이어 라벨링 규정 간소화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8.20~10.15	링크
환경	배출권거래제(EU-ETS) 연계 제조업·해운 분야 개정 관련 의견 수렴	8.20~10.20	링크
식품	영유아용 조제식 내 세레울라이드(cereulide) 독소 안전기준 규정 초안 의견 수렴	9.1~9.29	링크
조달	국제조달수단(IPI*) 개선 검토 위한 증거 수집(적용 범위, 효율성 등) *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9.8~12.1	링크
조세	조세 분야 옴니버스 지침 초안 의견 수렴	9.10~11.5	링크
조달	EU 공공조달법(EU Public Procurement Rules) 초안 의견 수렴	9.15~11.10	링크

📅 브뤼셀무역관 발간 자료

(과거 보고서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 번호	제 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월
글로벌이슈모니터링	EU 집행위원회 제안 공공조달법 초안의 주요 내용	2026. 9월
글로벌이슈모니터링	EU 철강 쿼터 규정 및 조강국 증빙 의무화 관련 우리기업 유의사항	2026. 9월
글로벌이슈모니터링	EU 사이버 복원력법(CRA) 및 지침문서 주요 내용 Q&A	2026. 9월
경통리포트26-19	EU 일반특혜제도(GSP) 개정 주요 내용	2026. 8월
경통리포트26-18	EU 소액 소포 과세 시행 및 관세법 개혁 정치적 합의 내용	2026. 8월
GMR26-045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7	EU 철강 관세율할당(TRQ) 국가별 배분 이행규정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6	CBAM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공제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5	EU의 식품 접촉 제품에 대한 규제 추진 동향	2026. 7월
경통리포트26-14	EU K-뷰티 시장 동향 및 규제 대응 가이드	2026. 7월

📅 브뤼셀무역관 영상 자료

썸네일(※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주요 내용
	○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 ('26.8월) - 8.12일부터 적용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핵심 의무사항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최근 입법 동향 ('26.8월) - 최근 EU 내에서 논의 중인 하류제품 확대 및 CBAM 제도 강화 방안 등 CBAM 관련 현지 최신 논의 동향 소개
	○ EU 통상규제의 본격 시행과 기업 유의사항 ('26.6월) - EU의 역내 경쟁력 강화 기조 및 핵심 통상규제의 주요 동향,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웨비나 ('26.6월) - '26.12월 EUDR 본격 적용에 앞서 제도 주요 내용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도 제고